

# 여야 수뇌 '4·27' 사생결단

분당乙 승패따라 지도부 교체 급물살

순천 승리땐 내년 총선 야권연대 보장



4·27 재보선의 전체 승패는 여야 내부의 권력 구도는 물론 정국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민주당 손학규 후보의 대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점에서 전체 재보궐 선거 승패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우선 분당을에서 강재섭 후보가 승리할 경우, 여권이 정국의 주도권을 계속 쥐게 되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 '안전수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강재섭 후보가 패배할 경우,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 교체에 이어 청와대 정무부인 교체, 개각 등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 내부의 권

력 계급으로 여권의 잠룡들이 나서면

서 대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분당을 출마하는 정치적 승

부수를 던진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당락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승리하면 명실상부한 야권의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는 한편 당내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밸런스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당내 위상은 물론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약화되는 처지를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당권·대권 주자를 간의 짙은 갈등이 이뤄지면서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손 대표의 분당을에서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에 불과할 전망이어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선공후사'의 명분으로 출마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의 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을 보선 결과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대권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남 김해을에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호남지역 2~3개 지역구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 여부가 결국

물론 유시민 대표의 대권 가능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유시민 대표는 야권 내부의 책임론 등에 시달리며 대권 도전의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도 내년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의 '시금석'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연대 주자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호남지역 2~3개 지역구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분당乙 판세, 아무도 몰라요"

강재섭·손학규 접전속 여론조사마다 예측 달라

4·27 재보선에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판세는 예상을 하기 힘든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현재 한나라당은 강재섭 후보가 약간 앞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손학규 후보가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등 판세 분석이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20일 마지막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실시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의 전화면접 조사에서 민주당 손 후보는 40.9%의 지지율로 한나라당 강 후보의 34.7%를 6.2%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강 후보 44.4%, 손 후보 42.8%로 순위가

역전됐다.

또 리서치뷰의 1095명에 대한 ARS(RDD) 조사에서도 손 후보는 54.9%를 얻어 40.1%에 그친 강 후보를 14.8%포인트나 앞섰다. 이 조사는 특히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의 전화면접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강 후보가 민주당 손 후보를 오차범위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지율은 강 후보 41.9%, 손 후보 39.6%으로 2.3%포인트의 격차였으며 적극 투표 층에서는 이 격차가 1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법안은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 '119선거도우미제' 운영

전남도 소방본부

전남도 소방본부는 4·27 재보궐 선거를 맞아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119선거도우미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119선거도우미제'는 119구급대가 선거 당일 중증질환자나 독거노인들

이 집·병원과 투표소 사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소방본부는 선거일까지 목포, 화순, 순천 지역을 관할하는 3개 소방서 별로 사전 예약을 받아 긴급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훈제어를 갖춘 전용구급차 등을 투입해 이들의 투표를 돋고 건강체크와 상담도 해 준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관예우금지법안' 내년 상반기 시행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검사와 장기복무 군법 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관·